

김동연 도지사 첫 결재... '민생경제 회복' 본격 시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1호 결재 문서로 서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다만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 예산 선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지사가 '조기 추경' '31개 시·군과 협의' 등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지사는 취임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경기도청에 등청해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이날 서명한 민생안정 종합계획은 '직접 지원'에 방점을 두고 신속·실질적인 대책을 바탕으로 총 3단계로 나눠져 시행된다.

계획안 1단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한 긴급 대책으로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농어업인 면세유 물류비 등 지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촉구 등 5가지다.

2단계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재정 확보가 필요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다.

▲고급리 대환 및 저급리 운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대환 자금 지원 ▲제도전 희망특례 보증지원 ▲채무 재조정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지역화폐 10% 할인 지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조식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양봉 피해 농가 지원 등

'비상경제 대응 종합계획'에 서명

직접 지원, 신속한 대책에 방점

단계별 시행 위해 예산 마련 시급

조기 추경, 31개 시·군 협의 '관건'

이 포함됐다.

3단계는 31개 시·군과의 협의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업으로 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0만 원 상향 ▲휴경농 활용을 통한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이 골자다.

“효과 보려면 가급적 7월에 임시 추경해야”

김 지사가 구상한 민생안정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선 관련 예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조기 추경을 비롯해 31개 시·군들과의 협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도는 계획안 1단계 긴급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국비 149억 원, 도비 93억 원으로 책정하고, 기존에 확보해 놓은 예산을 조기 집행해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를 보탬 계획이다.

2단계에선 필요한 예산을 총 국비 1077억 원, 도비 2121억 원으로 잡고 본예산 조기 집



김 지사는 취임 첫날인 1일 경기도청에 등청해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1호 결재로 민생경제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행과 1회 추경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 조기 추경 편성이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염태영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도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 등이 600억 원에 불과해 비상경제대책으로 쓸 재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재정 계획에 대한 조정을 통해 재원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도의회 원 구성이 이뤄지고 당선인 취임 이후 임시 추경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효과를 보려면 (7월 임시 추경)을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추경'을 위해선 도의회와의 협력이 중요한데 오는 12월 열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논의를 위한 추경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을 1호 결재 문서로 서명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기도 제공

현재 도의회가 78대 78대로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 제11대 도의회 공식 출범 전부터 갈등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지난달 28일 도 정부직무부지사 명칭을 '평화부지사'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로 조례 공포는

양당 합의 때까지 보류 상태다.

아울러 계획안 실현을 위해 도내 시·군들이 협력을 이뤄야 하지만 31개 시·군 중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22곳을 차지함에 따라 김 지사의 '협치' 노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진 기자

박지현 “출마 선언” 민주당 “자격 안돼” 반발

김남국 “차, 입당 늦어 출마 요건 미달
특별 인정해달라는 억지 부리고 있어”

차 “비대위와 당무 위원회 의결로
경선 참여한 김동연 후보 사례있어”



지난 1일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자 당내에서는 “자격도 없다”며 반발이 일고 있다.

‘친이재명계’로 알려진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3일 개인 SNS를 통해 박 전 위원장에게 “제발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좀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쓴 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당헌·당규상 출마요건은 갖춘 줄 알았다. 그런데 당 대표 출마자격은커녕 출마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달라니 정말 너무 황당하다”며 비난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전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당 대표 출마선언을 공식화 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월 27일 입당해 출마자격인 권리당원(당비 납부 6개월 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당규에 나오는 ‘당무 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며 자신을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처리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로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남한테는 엄정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특권을 거부하며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청년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며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 정치와 자리만 탐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며 일갈했다.

박 전 위원장은 출마자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개인 SNS를 통해 “당규를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사례를 들며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지방선거 때 김동연 후보도 비대위와 당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다”며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저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규에 따라 처리해 주시면 결과에 따르겠다”라며 당규 개정을 통한 당 대표 출마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전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헌·당규상 출마자격이 없지만 비대위에서 한 번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권리당원 6개월’ 규정을 3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별 기자

여야, 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형성

비과세 식대비 10만원→20만원 확대
시행되면 연간 최대 약 28만원 절약

여야가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른바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다.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 부대표는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1일 “점심 밥값이라도 아끼자며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며 “이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민주당은 밥값 지원법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대비가 20만 원으로 늘어나면,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율 24% 적용 시 연 28만 8000원, 월 2만 4000원의 세금이 감소한다. 또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 15% 기준으로, 월 1만 5000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김한별 기자

여야 만났지만 원 구성은 ‘불발’

권성동·박홍근 원내대표 담판 회동
민주, 본회의 열어 의장 선출 시사
국힘 “논의는 계속하자며 헤어져”

여야가 3일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원내대표 간 담판 회동을 벌였으나 또 다시 ‘협상 결렬’로 이어지며 원 구성은 결국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압박을 수위를 올리는 가운데 여야는 남은 시간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 원 구성 협상에 이틀만 한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논의를 계속해서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회동 내용에 대한 질문에 “협상 경과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얘기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봤다”고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야 간에) 결론에 이르면 좋고 합의가 되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그때 우리 당 입장을 밝히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중 협상을 재개하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별 기자

우상호 “4일 의장 뽑아야... 다른 상임위는 합의”

“의석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의장은 민주당서 추천한 분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3일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내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또 불발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의석이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선거해도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우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는 합의해야 한다”며 “의장을 뽑는다고 해서 모든 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 몫인 의장을 선출해 국회 공전 상태를 멈추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속 원 구성까지 일방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검토 받았다”며 “한쪽 당만 모여서 혼자 개원하면

모양이 안 좋다. अच्छ히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했으니 의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 구성과 연동되지 않는다”면서도 “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나라 살림을 맡길 만한 분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당대회의 정점으로 떠오른 ‘당 대표 권한 축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최고 위원이 거의 거수기 대접을 받았다”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상의할 수 있는 범주는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정도의 보완”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당 대표 권한은 전혀 건들지 않게 된다”며 “결론적으로 큰 권한 이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50대 50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